

“차별성 없는 제주학진흥원 설립 명분 부족”

“국가균형위,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해야”

어제 도의회 문광위서 타당성 연구용역 부실 질타 “기능·업무 독창성 없어”... 도 “설득 논리 개발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능과 업무의 차별·독창성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없어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표출됐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못매를 맞았다.

제주도는 현 제주연구원 내 부설 기관인 제주학연구센터를 재단으로 독립 전환하기 위한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진흥원 업무) 제주문화 예술재단과 세계유산본부 업무와 비

슷해 독창성이 없다”면서 “차별성이 없는데 행안부가 과연 통과시켜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제주에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행안부가 볼때 너무 많다는 평”이라면서 “타당성 연구용역 한가지 안을 갖고(설립)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설득 못시킬 것”이라고 가세했다.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용역) 제주를 모르는 사람이 한 것 같다”면서 “이 정도 용역 들고 가서 행안부를 과연 설득시킬 수 있겠나”라며 용역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과 문경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세계유산본부와의 업무 중복 우려를 제기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한 확실한 업무 분장 필요성을 당부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관련해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세계유산본부와 재단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은 조만간 만나서 협의를 통해 정리하겠다”면서 행안부 심의에 대비한 대응 설득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는 12월중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내년 상

반기 행안부 협의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 예산 확보 및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내년 7월 설립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은지기자

송재호 ‘균형발전 법안’ 발의 자문기구 뛰어넘는 책임 강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사진)은 23일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균형발전 관련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또한 다부처·다지역에서 소규모로 단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균형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것 외에도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 이양, 균형위가 지역뉴딜·인구감소·초광역협력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기관을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변경함으로써 회계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는 일하면서 자문기구 성격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한계를 경험했다.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을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3법 개정을 통해 균형위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부미헌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의회 ‘제주안심코드’ 도입 제동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보건복지위, 동의안 심사보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필요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제주안심코드’ 도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안심코드’는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이용자가 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3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보류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은지기자

민·관 협업 최우수 ‘어린이 통학로 조성’

협업·협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올해 협치·협업 최우수 사례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민·관·학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0년 협치·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5개 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치경찰단의

‘민·관·학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례는 제주도 유일 자치경찰제를 활용해 스쿨존 전담반 직제설치, 학교별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한 문제해결 사례라는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폐삼다수 병을 활용해 에코백, 플리스자켓을 만드는 자율순환 프로젝트로 그린 뉴딜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도 생활환경과의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제주 지역 자원 순환 프로젝트’와 갈굴진흥과



지난 2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협치·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5개팀이 수상했다.

의 라이브 커머스 등 소셜 마케팅을 도입하는 ‘제주의 생산자-소비자간 직배송사업, 산지 유통혁신 전국화 모델’ 사례에 들어갔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지역공동체, 삼무공원길’과 방역정책기획단의 ‘국경수준의 검역 체계 제주형 특별입도 절차 운영’ 사례는 장려상을 받았다.

제주도는 협업의 좋은 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사례집 제작, 홈페이지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공모 접수된 총 34건의 사례 중 전문 평가단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한 부서별 발표식사로 이뤄졌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도민, 디지털 성폭력 법·제도 인식 부족

여성가족연구원 530명 조사

제주도민들의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530명(여성 317명, 남성 212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표본추출로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25% 수준이다.

조사 결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강경험이 응답자 전체의 절반(43.2%)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75.3%로 법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 높았으며 대응도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SNS 계정의 공개 설정 범위 재설정, 몰래카메라 설치가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 주저, 온라인상 일상에 관한 게시물 올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근절정책으로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신고 포상제 실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은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여성의 경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시설 확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와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이 제시됐다. 오은지기자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공고 제2020-01호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중단 안내 공고

2020년 제주지역화폐(탐나는 전) 발행으로 인하여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를 중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장

- 판매중단일**
2020년 11월 30일
- 중단 사유**
제주 지역화폐(탐나는 전) 발행
- 가맹점 및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안내사항**
 -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5년) 내 상품권 소지자는 2021. 12. 31.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상품권 뒷면에 기재) 가맹점에서 사용
 - 2022. 1. 1.부터 유효기간 이내 상품권을 가지고 계산 분은 제주은행에서 제주지역화폐(탐나는 전)로 등가 교환
- 문의**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Tel 064-755-7801, 7803)

당일생산! 당일발송!

동영 청정바다 생굴

믿을 수 있는 동영굴수협
정식등록 지정중도매인23번!
도매업인데 비싸서 되겠습니까?
더 이상 비싸게 사지 마세요!
품질 좋은 최상급 생굴을 무대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가격 부담을 낮춰 드리겠습니다.

최상급 생굴 5kg	小	中	大
최상급 생굴 10kg	小	中	大

생굴을 먹을 수 있는 철이다! 굴~ 하면 동영이다!!
겨울철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집에서 맛볼 수 있는
산지직송 동영굴이 택배로 배송된다!

주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9-1 청정수산
계좌 : 수협 776-62-037473 이선곤

주문 전화 **010-2110-8506 / 010-3551-2352**

당일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 문의주세요

예언의 집

권

운세, 운명을
기도(도법)로
정성으로
풀어 드립니다.

직접상담
010-5736-6951